

## 규제영향분석서

### I. 분석대상 규제개요

1. 조례명 (규제사무명)	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(허가기준 및 세부시설기준 제정)	2. 구분						
		신 설	○	강 화		내용 심사		존속 기한 연장
3.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	○ 강릉시 경제진흥과장 전 규 집 에너지관리담당 김 두 호 지방공업주사보 김 대 기							
4. 근거법령 등	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 제2항 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」 제10조 제1항					관 련 규제수	1건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							
6. 규제존속기한	○ 「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」 폐기 시까지							
7. 종전 규제 및 신설(변경) 규 제의 내용	<b>「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」</b> <b>제4조(허가기준)</b>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.  ○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세부허가기준 - 설치제한지역지정 :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-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강화 : 사업소경계의 2배 - 사업소 부지와 진출입 안전 강화 : 도로폭 8m → 12m  ○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의 세부허가기준 - 설치제한지역지정 :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- 공공안전을 위하여 사업소 경계 안전거리 강화 : 사업소경계 안전거리의 2배 - 사업소 부지와 진출입 안전 강화 : 도로폭 4m → 8m - 용기보관실(사무실면적) 강화 : 19㎡(9㎡) → 38㎡(18㎡) - 주차장 등 활용부지확보 강화 : 11.5㎡ → 23㎡  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(허가의 기준)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조(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) ① 법 제3조제4항,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,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, 액화석유가스 판매, 가스용 품 제조, 외국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 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					

### II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

항 목	분 석 내 용
가. 규제의 필요성	<p>1) 문제정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공공의 안전과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</li> <li>○ 액화석유가스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제한지역 및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.</li> </ul> <p>2) (신설·강화) 필요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제2항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허가요건 및 세부시설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허가의 공정성을 기하는 본 규제의 신설이 필요함.</li> </ul>
나. 규제대안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: 강릉시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</li> <li>○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: 해당 없음</li> <li>○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: 해당 없음</li> </ul>
다. 비용과 편익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,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신규허가, 사업소이전 및 용량증가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</li> <li>○ 기존 사업자 및 신규 신청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음.</li> </ul>
라. 규제의 적정성	<p>가) 법적근거의 명확성 및 규제의 명료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제2항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음.</li> </ul> <p>나) 규제수준의 적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, 다중이용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가능하며, 안전거리는 법에서 위임된 거리 이내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.</li> <li>○ 타시도 사례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, 춘천시 등</li> </ul> <p>다) 구비서류, 처리절차, 관리감독, 보고 절차 등의 적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 없음</li> </ul>
마. 이해관계자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법예고 진행중('15. 5.19~6.8)</li> </ul>
바. 규제집행의 실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·기술</li> <li>- 기존 허가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추가집행조직 불필요</li> </ul>